다산포럼

미투 파장, 성 평등 사회로 가는 청신호

유 지 나
동국대교수·영화평론가

지난주 광주에 강연하러 갔던 길에 송정역 근처 시장에 들렀다. 그때 동행해 준 고마운 지인이 한 골목길에서 '이곳은 직업여성들이 살던 곳'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직업여성인데요'라고 답했다. 순간 우리는 세월따라 흐르는 언어 변화를 느끼며 같이 웃었다. 실제로 '직업여성'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뜻하지만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도 여전히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다.

한파를 뚫고 직업여성들이 당한 직장 내 성폭행 고발이 사회 전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민망하고 버거워도 SNS를 타고 퍼져 나가는 #미투 파장은 성 평등 사회로 가는 청신호이다. 부당하게 당한 피해를 고발해도 그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처벌을 하지 못해 온 관습적 병폐도 드러나는 중이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은 이런 관습적 병폐의 정황을 보여 준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고백을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이라고 설정한 뒤, 관점 변화 과정을 설명해 나간다. "거대한 권력을 거머쥐고,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코어 1%의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힘없고 빽 없는 일개 검사의 절규 따윈 비웃으며 무시하는 그들"이라고 검사 집단의 정체성을 묘사한다. 안태근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려도 주위 사람들이 말리며 했던 말도 인용된다. "지금 떠들었다가는 그들은 너를 더더욱 무능하고 문제 있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

가해자는 잘나가고

특권층 내부 비리를 폭로하며 화제를 모았던 범죄 스릴러 '내부자들'(2015, 우민호)의 한 대목을 보는 것만 같다. "돈 없고 빽 없으면 나가 뒈지세요. 참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우장훈 검사(조승우)의 대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봉건적 위계질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실을 자양분으로 삼는 허구적 상상력의 메커니즘이 새삼 확인되는 순간이다.

묵묵히 일하며 체념하기도 했던 그는 가해자는 잘나가고, 피해자는 박해받는 8년의 아픔을 토로한다.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뉘우치며. #미투 운동에 자극받아 또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 공론의 장에 들어서는 용기를 낸 것이다.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검사 조직의 부정의한 작동 방식이 실화로 들통나 버린 셈이다. 위기에 처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고,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최초로 직권 조사하기로 의결하면서, 남성 위주 조직 문화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남녀유별이 남녀 차별로 해석되고 피해자 여성을 꽃뱀에 비유하는 낡은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21세기 성 평등 관계망으로 변화해 가는 파장이 예감된다. 그런 희망을 안고, 1984년 미국 최초의 직장 내 성폭력 승소 사건인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을 영화로 담아낸 '노스 컨트리'(2005, 니키 카로)를 다시 보며,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와 연대하는 분들께 강추하고 싶다.

영화 '노스 컨트리'

조시(샤를리즈 테론)는 폭력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인 미네소타 북부로 돌아온다.(미네소타주는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 본토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주이기에 영화 제목을 또 다른 '가부장 나라'로서 '노스 컨트리'라 붙인 듯하다) 아이들 생계도 책임진 조시는 광산에 취업한다. 전통적으로 남성 직장이었던 광산이 철강에 치여 쇠락해 가는 중인 데다 여성까지 들어와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한 남성들은 여성을 동료로 대하지 못한다.

탄광 벽에 난무하는 여성 폄하적 음담패설 낙서와 농담도 그들에겐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책처럼 작동한다. 그런 농담도 소화해 내는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한다, 라고 조시에게 훈계를 하기도 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하며 서로 봐주는 '그들만의 세상'이다. 그 와중에 갱도에서 강간당한 조시는 사장과 노조에 성폭력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호소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얼굴에 철판 깔고 견뎌야지 저항하면 쫓겨난다, 라고 충고하는 여성 동료는 성추행을 당해도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침묵을 깬 조시는 불량한 꽃뱀이란 풍문에 시달리며 충격받은 아이와의 갈등으로 2차, 3차 피해를 당한다. 그런 고통을 디딤돌 삼아 더욱 용감해진 조시는 도시에서 실패를 겪고 귀향한 변호사 빌(우디 해럴슨)과 함께 직장 내 성차별 집단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게 된다. 그 용기에 자극받은 소수 동료들, 특히 루게릭병을 앓는 글로리(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온몸으로 증언하는 법정 장면은 연대의 힘을 보여 준다. 그 승리의 기록은 #미투 파장처럼 국경을 넘어 성 평등 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청춘 톡·톡

개인 정보 보호가 기본이다

조 아 윤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함을 알렸다. 재난 발생이나 범죄 예방 등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적기에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빅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과 연계가 부족해 미흡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실제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국가적 이슈 관련 사항 분석을 위해 전문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실제 활용되는 분야가 미흡해 기구 신설이 절실하다고 한다. 이렇듯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기업 할 것 없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에 반해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다.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뉴스가 줄어들지 않고 유출된 데이터의 파악된 규모만 하더라도 수천만 개에 다다르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개인 정보 유출 이후 사후 관리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온·오프라인 교육업체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개인 정보 보안망이 뚫렸다. 이름만 듣고도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는 기업에서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2015년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납세자 33만 명의 납세 정보를 이용해 가짜로 세금 환급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인 해킹이 아닌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안 질문의 답은 쉽게 얻을 수 있거나 간단히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로, 범죄자들은 서비스 보안 질문에 정확히 답함으로써 침투가 가능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인 정보'라는 단어 뒤에 있는 '보호'라는 단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구글'에 이름만 검색해도 예전 SNS에 올렸던 일반인들의 사진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전까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원인과 필요성의 부재, 사회의 발전을 이유로 개인의 정보들을 기업들의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방관했다고 한다면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 및 기관·기업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리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들에 맞추어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의 내용(목적 이외의 수집 제한, 정보 주체의 동의 필요 등)처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원칙들뿐만이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보안 관련 체계를 설립하여 실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사회적·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할 것이라면 더욱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개인들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개인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바뀐 핸드폰 번호로 오는 대출 문자, 상담전화, 보이스피싱 전화는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단골집에 배달 주문을 넣을 때 주소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 그 정보 하나하나가 개인 정보이고, 나의 삶이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개인 정보 보호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진 다음에야 편리함이 혜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기 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김 은 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 자문위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 정부의 최종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래의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방안 모색으로 공감대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가상화폐 논란과는 달리 그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양측 모두가 기술 발전의 필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다수의 개인이 참여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하고 중앙 관리자나 거래 중개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또한 거래 과정의 데이터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요. 이러한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은 기존 산업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괴적이고도 동시에 혁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자신이 확보한 신용을 기반으로 입출금 수수료나 금융 상품의 거래에 개입, 중개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글이나 국내 포탈 역시 정보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자 간에 정보 전달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나 광고로 이익을 실현합니다. 만약 기존 방식의 신용에 기반한 중개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정보나 계약, 상품이 직거래 된다면 어찌 될까요? 매우 유용한 방식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금융, 자본, 상품 시장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블록체인 적용 시스템의 기술 성숙도와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에서 기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공고한 공공·민영 신용 시스템의 이익 관계나 관련 거대 기업의 이니셔티브와 많은 부분 충돌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 창업 및 창업 기업에 의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계속되겠지만, 블록체인의 현실적인 적용은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 및 민간 거대 기업이 먼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사업을 활발히 고안하고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금융에서 해외 송금 및 이체 과정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진다든지, 아마존에서 중고 물품 거래에서 물품에 대해 보다 투명한 과거 이력의 정보가 서비스된다든지요. 이렇듯 가까운 미래에서는 기존의 산업 시스템과의 충돌보다는 기존의 기업이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지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술 적용이 발굴되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평소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지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불투명한 과거 이력이 손쉽게 추적, 공개되고 이 정보가 중간 과정에서 제삼자에 의해 왜곡될 수 없는 시스템의 신뢰를 보여주는 방식이 될 텐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궁금했지만,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과거 이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을거리 문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지난해 여름, 살충제 파동을 겪었던 달걀이나 육류, 해외 농산물 같은 식품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식품 원산지에서부터 전 유통 과정에 관련된 정보가 달걀에 붙어 있는 전자 태그로 쉽게 알 수 있다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겠지요. 소비자의 정보력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중고차 시장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이 공개되고 중간 조작이나 가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겠지요.

이런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나 창업에서의 아이디어나 제품 생산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예로 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이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면, 창업자가 제일 걱정하는 창업 아이디어의 도용, 탈취의 위험 없이 제품 실현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 간 매칭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기술 탈취나 분쟁의 소지 없이 이익 배분을 포함한 스마트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수요 공급자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아래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중요한 축인 창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플랫폼의 구축을 통한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먼 미래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이 시스템 내로 편입되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많은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육성 및 활용 방안 및 관련 법규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社 說

국회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국가적 과제인 5·18 진상 규명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국회는 이번 주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상임위 심의를 본격화한다. 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내일 헬기 사격 등에 대한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방위는 모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9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0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세 차례 이뤄졌지만 부실한 검증, 강제 조사권 미부여 등으로 한계를 노출했다.

5·18 연구자들이 '광주의 상처를 덧나게 한 조사'라고 혹평하는 이유다. 이로 인해 발포 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암매장지 발굴 등이 '미완의 진실'로 남았고 왜곡 및 폄훼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확실한 진상 규명과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 채택이 필요하다는 게 5월 단체와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5·18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과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또 특별법은 처벌보다 진상 규명에 역점을 두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동행 명령 제도와 청문회를 활용해 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규정도 필수적이다.

5·18 진상 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여야는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이번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농업 소득도 줄어든다니

농업인 열 명 가운데 아홉 명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읍·면 농업인 936명에 대한 우편 설문, 그리고 전국 도시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상대로 가구 방문 면접 형태로 조사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응답자의 88.0%는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응답 비율은 농촌과 도시에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농업 전망 2018' 보고서에서 올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을 전년보다 8.7% 감소한 1014만 원 내외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에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농업 임금이 전년보다 13%가 오르는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소득은 작물 재배를 통한 총수입에서 경영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 비중은 2017년 28.7%에서 올해 25.5%로 하락세를 계속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농업 경영의 최대 위협 요소인 일손 부족 해소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또한 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코피 전략

요즘 학교 폭력이 흉포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했지만 옛날에도 동네나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대부분 시시하게 끝났다. 둘 중 한 명이 코피를 흘리면 자연스럽게 패자가 됐고 코피를 터뜨리게 한 아이는 의기양양해 하며 싸움을 끝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들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군사 전략이 최근 화제다. 이른바 '코피(Bloody Nose Strike) 전략'이다. 이 전략은 주한 미국 대사로 아그레망까지 받았다는 빅터 차가 지명 철회되는 원인이 됐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됐다.

코피 전략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쟁 대신 핵·미사일 개발 관련 시설을 겨냥해 제한적 정밀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군사 옵션 중 하나다. '목을 따지 않고 코피를 터뜨리는 수준의 공격…'으로 북한이 겁을 먹게 해 핵 포기 협상에 나서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략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적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타격하는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과는 다르다.

차 내정자는 미국 내 손꼽히는 대북 매파(강경파)로 꼽힌다. 그런 차 내정자가 이 전략을 반대했을 정도니 코피 전략의 무모함을 짐작할 만하다. 낙마 이후 차 내정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한적 타격에 대해 북한이 반격하지 못할 걸로 믿지만, 이는 큰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예측 불허의 김정은이 보복을 자제하리라 확신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차 내정자까지 낙마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들이 운신할 공간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대표적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만약 코피를 흘린 북측의 보복이 남쪽을 향할 경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무모한 전략을 폐기토록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박지경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